

남북 화해무드에 北 근로자 직업교육센터 ‘큰 그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주간 간담회
역량 결집해 北 근로자 직업교육
“동남아 등 외국인 대신 北 인력
고용시 북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며 말을 하고 있다. 박 회장 왼쪽에는 중기중앙회 이흥우 부회장, 오른쪽으로는 중기중앙회 신영선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특정지역에 북한의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산업·직업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남북 평화 직업교육센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UN의 대북제재가 풀리는 등 남북경협이 완전하게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는 동남아시아 등 수 많은 해외인력이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이들 인력 대신 북한 인력을 쓰면 된다”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서고 제조·서비스 등 300개 가량에 달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의 노하우를 활용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해외근로자들이 용접, 금형 등 뿌리산업을 비롯해 도금, 연색, 가구 등 소위 ‘3D 업종’에서 주로 일하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남측 중소기업들이 북측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장 등의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엄청난 돈이 외국으로 (송금돼)나가는데 이것이 북한으로 가면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력의 질이 좋은 북한 근로자들을 위해 (개성공단 등의 경험에 있는) 중소기업계가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와 재외동포 등을 포함해 현재 국내에는 59만명이 취업 목적으로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현장에선 여전히 25만3000명 가량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이들을 모두 포함해 필요한 산업 인력 수요를 연간 110만명 정도로 추산할 때 이 가운데 절반 가량만 북한 근로자들로 활용해도 현장에선 인력에 상당한 숨통이 트일 것이라 기대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등을 적용해 북측 근로자들이 연간 3000만원 정도를 받고 이 가운데 2000만원 가량을 송금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약 100억 달러 정도가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의 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이같은 구상은 (경협 등)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이 완전이 개방이 돼 정상적인 모습이 됐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지금으로선 실무 검토와 구상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남북이 한창 긴장 관계

를 유지하고 있던 지난 2014년부터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를 꾸려 그동안 세미나 등을 통해 남북 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위원회는 개성공단에서 가장 많은 북측 근로자를 고용해 공장을 운영했던 삼덕통상 문창섭 회장과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가 맡았다.

이와 별도로 중기중앙회는 지난달엔 통일부에 중소기업과 신경제 10대 과제를 전달, 남북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중소기업들의 역할 등에 대해 관련 부처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도 했다.

박성택 회장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는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UN제재가 풀리고 관계가 정상화되면 중소기업계는 개성공단 조기가동과 제2, 제3의 개성공단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 및 서비스 현장에도 많은 북한근로자를 고용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역할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여성벤처협, 소통·협력 등 주제로 ‘CEO 혁신 아카데미’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벤처기업인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12일 신한은행 기흥연수원에서 ‘2018 여성벤처 CEO 혁신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장을 위한 전략특강, 현장소통, 협력증진의 3가지 테마로 진행된 이번 혁신아카데미는 구글코리아 김태원 상무의 ‘비즈니스 혁신과 창조적 기업문화’, 안세희계법인 이남재 회계사의 ‘벤처기업의 질세전략’ 등 특강도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성벤처협회

이대목동병원, 지역주민과 상생발전 논의

“병원쇄신·사회공헌활동 전개할 것”

이대목동병원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 상생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한중민 병원장, 정성애 대외협력실장, 정혜경 고객만족실장, 이사라 홍보실장, 송혜경 대외협력 부실장, 김한진 사무부장 업무대행 등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병원 인근 목동 주민센터를 찾아 노병채 목동 동장과 통장협의회를 만나 병원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노병채 동장 등 지역 통장들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 병원의 전문적인 역량을 이용한 응급처치 교육, 건강강좌 실시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중민 병원장도 올해 9월 진행될 위대장센터 개소 기념행사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고, 지역 내 여러 기관·단체와 함께 봉사활동이나 건강강좌 및 무료 건강검진,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함



지난 10일 한중민 이대목동병원 병원장(오른쪽부터), 정성애 대외협력실장, 정혜경 고객만족실장, 이사라 홍보실장, 송혜경 대외협력 부실장, 김한진 사무부장 업무대행. /이희의리뷰

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응답했다.

한중민 병원장은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진정한 지역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병원 정책에 반영해 병원 쇄신과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개성공단 기업 “북미정상회담 직후 방북”

“시설 점검해야 연내 재개 가능”
개성공단 추가입주 문의도 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시설 점검 등을 위해 방북을 재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안에 점검을 해야 연내 가동을 위한 준비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추가 입주에 대한 문의도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다음달 22일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직후 방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성공단기업 관계자는 “북미 회담 결과에 달렸지만, 공단 재개 시점은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며 “시간이 늦어질수록 입주 기업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 다음 달이라도 공단에 가서 기계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연내 재개가 가능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입주기업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지난 2월26일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방북은 무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39.6% (40개사)는 개성공단 재개 예상 시점을 ‘내년 이후 현 정부 임기 내’로 꼽았다. 공단 재개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예상한 기업도 34.7% (35개사)에 달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96%는 개성공단 재

개시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69.3%는 ‘정부와 북측의 재개조건 및 상황 판단후 재입주’를, 26.7%는 ‘무조건 재입주’를 하겠다고 답했다.

‘개성공단이 국내의 공단 대비 경쟁력이 우수하다’ (79.4%)는 이유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한반도의 봄이 성큼 오면서 새롭게 개성공단에 입주할 하거나 또는 분양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하는 국내외 기업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대책위원회 태스크포스(TF) 핵심 관계자는 “남북 관계 개선이 진척을 보이면서 개성공단에 새로 들어가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 입주하기 위한 방법이나 분양 등을 묻는다”고 말했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도 “중소, 중견 기업 중에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주로 봉제업이나 건설자재 등 업종도 다양하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중소기업계 “‘지역기반형’ 中企 육성해달라”

오늘부터 18일까지 中企 주간행사

“지역 혁신성·성장잠재력 떨어져
지방정부에 권한 대폭 이양해야”

범중소기업계가 올해 30회째인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지역기반형 중소기업’ 육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 경제를 실현하고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특히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중소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한 달 안으로 바짝 다가온 6·13 지방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후보자들에게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아젠다를

보다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범중소기업계가 이번 중소기업주간에 마련한 지역기반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 과제에는 ▲제조현장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확산 ▲지역별 중기 공동구매 전용보증제 도입 ▲노후 산업단지 정비 및 그린 리모델링 ▲지역 청년·지역 중기 취업 유인책 마련 ▲지역 스타기업 발굴 ▲해외진출 중기의 국내 유턴 지원 강화 ▲공정위와 지자체 조사권 분담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또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서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전문단지 조성(부산) ▲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대

구) ▲안산 섬유패션종합지원센터 건립(경기) 등 지역별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역에는 일할 사람도, 돈도 부족하다. 혁신성,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민선 7기는 지역 사정과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지역 기반형 중소기업’이 출현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상당한 실정이다. 혁신의 아이콘인 벤처기업은 수도권에 72.7%가 몰려있다.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도 수도권(73.7%)이 비수도권(26.3%)에 비해 월등하다.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비 역시 수도권에 67.3%가 집중돼 있다. 예금도 수도권에 70%가 집중돼 있고, 청년인구도 수도권이 51.4%로 비수도권(48.6%)에 비해 많다. /김승호 기자